LH "꼬우면 이직해" 파면 될까…"민중은 개돼지" 사례보니

'블라인드'에 "차명 투기하며 꿀빨래" 논란
'나향욱 사건' 비슷하단 지적…사회적 공분
LH·전문가 "특정시 파면까지 충분히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꼬우면 니들도 (LH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써 공분을 불러일으킨 익명 게시글 작성자가 고발됐다. LH는 실제 직원일 경우 즉각 파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몇년 전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큰 논란을 불러왔던 '나향욱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16일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최근 이 커뮤니티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9일 게시된 이 글은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 LH 의혹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LH는 이 작성자가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공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고,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LH는 또 작성자가 실제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을 연상시킨다는 시선이 나온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신문사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해당 신문사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교육부는 당시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나 전 기획관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나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나 전 기획관은 2018년 복직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국장 징계 수준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이번 블라인드 글과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은 시민들을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차원에서 비슷하다.

블라인드 글에는 '개돼지'와 같은 직접적인 비하 표현은 없지만 민감한 사회적 사건에 분노하는 이들을 비웃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나 전 기획관은 언론을 통해 만방에 알려졌지만 발언을 꺼낸 건 사석이고, 이번 블라인드 글은 공개적인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수준이 '강등'으로 그친 반면, 블라인드 글은 LH 직원이 맞을 경우 파면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LH 관계자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사직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와 공사의 명예훼손을 시키면 안 된다"며 "해당 인물은 공사 직원일 경우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시켰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입혔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누군지 특정이 되고 나면 인사위원회를 열 것이고 파면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만일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저희도 당연히 소송 절차에 응해서 사법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도 파면 징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형사적으로는 불기소나 기소유예 결정이 나더라도 충분히 내부징계나 해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봄과 황사 서울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지만 고농도의 황사가 유입되면서 환경부가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튿날인 16일 오후 경기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대기가 뿌옇다.

광주 청년진보당 "부동산 투기 근절 근본 대책 마련을"

"투기 이익 몰수해 주거 정책에 써야"…정치인 전수조사 촉구

광주 청년 자치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부당 이익 환수 등 근본적인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청년진보당은 1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류 모두의 재산인 '땅'이 누군가의 소유가 돼 자산을 불리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며 "LH 직원들의 투기는 '돈 없고 내 집 마련 못하는' 청년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윤희 기자

"대변 봤다고 기저귀로 얼굴 폭행"…피해 학부모, 靑 청원

"두달간 300여건 학대…말리는 교사 없었다"

"우리 아이들은 2개월 간 약 300건의 학대를 당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피해 아동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원장과 가해 교사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상습 집단 아동 학대를 한 원장과 교사 모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자신을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엄마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 6명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를 일삼았다"며 "선생님 중 단 한명도 때리지 않거나 이를 말리며 '안돼!'라고 말해준 선생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저희 부모들은 경찰서에서 가슴을 치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아이들의 학대가 담긴 영상을 지켜봤다"며 "(가해 교사들은) 아동이 자지 않자 휴대전화 후레쉬를 3분간 비추고 낮잠을 자지 않는 장애 아동의 얼굴을 4차례 때린 뒤 아이가 고개를 들 때마다 2분간 아이를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의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머리를 14회 때리고 아이를 때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아이들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장에 가두고 아이가 대변을 봤다고 기저귀로 얼굴을 때림 등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학대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이들은) 극심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심리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며 "배변훈련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진 아이부터 코피를 쏟는 아이, 어린이집 가방만 봐도 무섭다고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아이 등 여전히 다양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극심한 학대를 겪은 두명의 아이는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가해 교사 6명 중 2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는 교사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 원장은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